

예고 없는 기습 核도발…남북관계 다시 파국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 가능성
한반도 정세 냉각기 거쳐 빙하기

북한이 6일 기습적으로 수소탄 실험이라는 제 4차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다시 거센 풍랑에 휩싸이게 됐다.

‘8·25 합의’ 이후 유지되던 남북 대화 모멘텀도 실종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한 이번 4차 핵실험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12일에도 3차 핵실험을 단행해 출발부터 남북관계를 꼬이게 한 바 있다.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위기를 맞았던 남북관계는 그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로 개선 조짐을 보이다가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돼 당국 대화의 물꼬를 텄다.

작년 8월에는 북한의 지도도발 및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8·25 합의로 극적 반전을 이루기도 했다. 8·25 합의 이후 작년 10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되고 남북 민간교류도 활성화돼 남북관계 개선 기대가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1~12일 개성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이산가족 및 금강산관광 등 남북 현안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로 결렬되면서 남과 북은 이후 냉각기를 맞게 됐다.

그나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측의 통일외교 정책을 비난하



북한이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작전을 마친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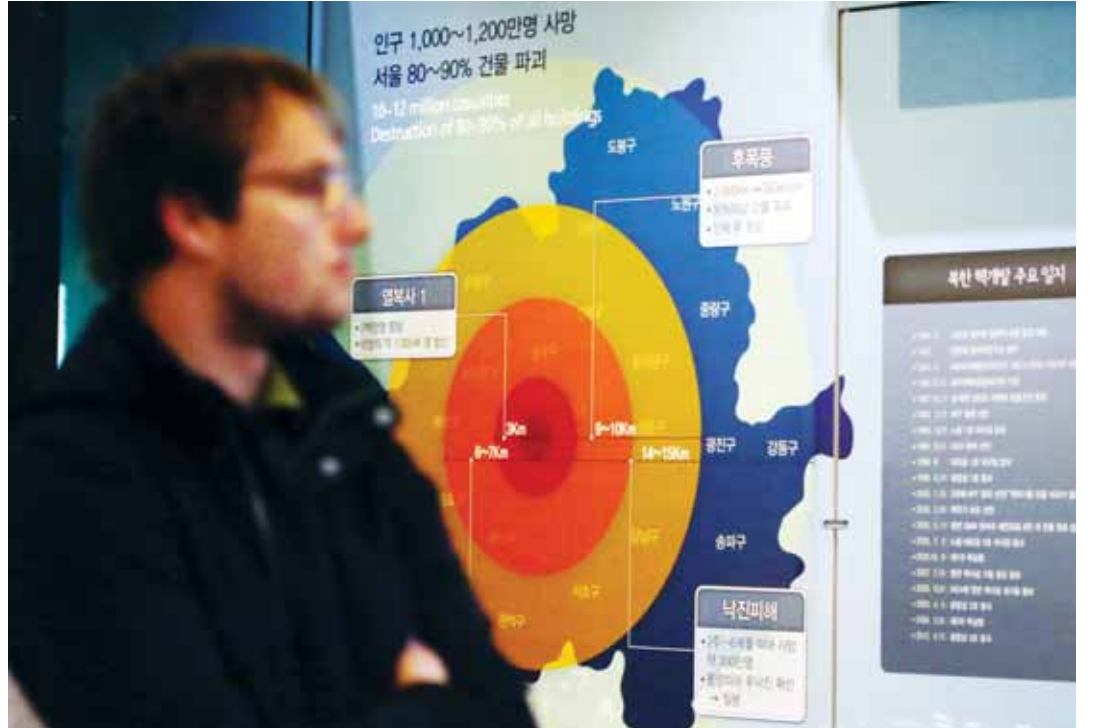
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함에 따라 남북대화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빙하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는 이번이 북한의 첫 핵실험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지금 상황에서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에 반발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1~3차 핵실험 때는 직간접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예

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외관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4차 핵실험을 단행해 의외라는 반응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충격적”이라며 “김정은의 신년사 등 북한의 앞선 행보를 모조리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번에는 일단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5월 초 열리는 당 대회를 통해 외교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핵무기 폭발 피해 예상도가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지진 규모 작아 수소폭탄 아닌 듯”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소형화 성공 美·러시아밖에 없어”



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발표에 대해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하는데, (지진 규모를) 측정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번 3차 핵실험(위력)은 7.9kt, 지진파 규모는 4.9가 각각 나왔는데, 이번에는 (위력이) 6.0kt, 지진파는 4.8로 더 작게 나왔다”면서 “수소폭탄은 (위력이) 수백kt이 돼야 하고 실패해도 수십kt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이어 ‘수소폭탄으로 의심되는 정황에 대한 보고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면서 특히 “수소폭탄이 소형화됐다면 리히터 규모가 약하게 나올 수 있지만 소형화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폭탄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소형화 여부는 분석해 봐야 한다”며 “(수소탄이 아니라면) 지난번과 똑같은 핵폭탄”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이번 핵실험의 사전정후가 없었던 것과 관련, “이미 장치를 해놓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이라면서 “1, 2, 3 경도가 있는데, 지난번에 두 차례 실험을 했던 2경도의 옆에 가지를 쳐서 경도를 만들고 그 안에 이미 장치를 했기 때문에 단추 누르는 시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또 핵실험 시기와 관련, “(5월 초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성과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수소폭탄이 대단한 성과라고 발표하고, 그렇게 북한 인민들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추정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朴대통령 “단호한 응징”…여야 규탄 결의문 채택 추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문재인 “北 평화 위협해 얻을 것 없어”

북한이 6일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청와대와 정치권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으며, 여야 정치권도 긴급 지도부 회의를 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이 주장한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 관련 부처별 조치 계획과 상황 평가, 그리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인 대북제재 조치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병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낮 12시부터 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한 뒤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깨는 도발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여야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돼 있다”면서 결의문 채택 시기는 “8

일 본회의 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보 관련 상임위 간사단과의 긴급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의 필요성에 공감,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북한이 평화를 위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평화를 흔들리는 북한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 엄중 대응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여야, 정부와 국회가 따로 없다.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안보특위, 국회 정보위·외교통일위 등을 중심으로 북핵 TF를 가동해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